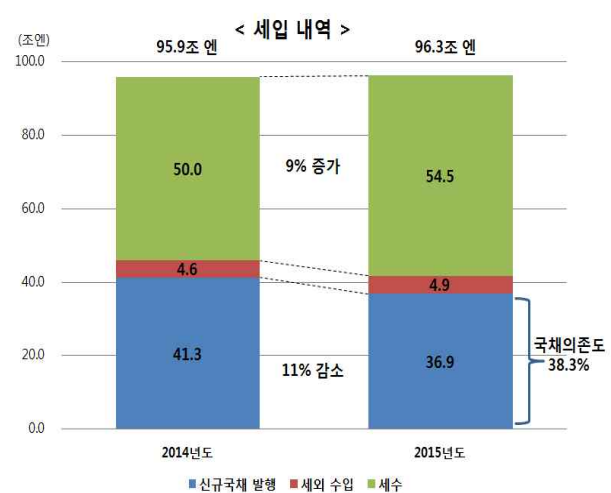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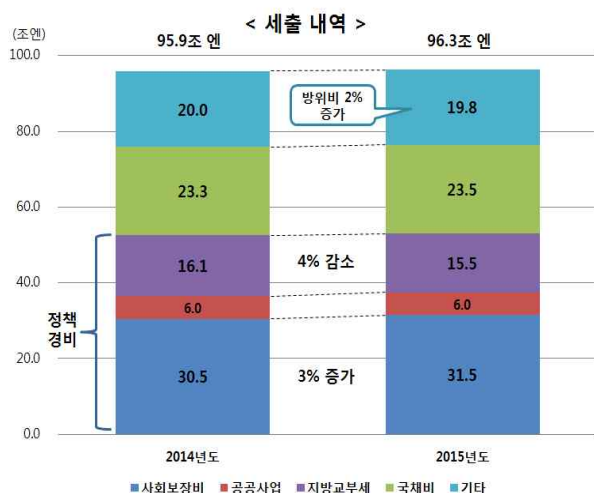


2015년도 일본정부의 예산 규모는

- '1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6조 3,420억 엔으로 전년 대비 0.5% 증가
- 세수는 법인세, 소득세, 소비세 등이 전년 대비 9% 증가한 54조 5,250억 엔으로 추산

□ 최대 규모로 예산편성

- '15.2.12일 일본정부는 '1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,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은 96조 3,420억 엔으로 전년 대비 0.5%(4,596억 엔) 증가한 과거 최대 규모
 - 의료·간병 등 사회보장비가 전년 대비 3.3% 증가한 31조 5,297억 엔
 - '15년도 세수는 기업의 수익 개선에 따른 법인세, 임금 인상에 의한 소득세, 소비세를 인상에 따른 소비세 등이 전년 대비 9%(4.5조 엔) 늘어난 54조 5,250억 엔으로 전망
 - 신규 국채발행액은 전년 대비 11%(4.4조 엔) 감소한 36조 8,630억 엔
- *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채의존도는 38.3%로 6년 만에 40%를 하회



- 기초 재정수지의 적자액은 13조 4,123억 엔으로 전년 대비 4.6조 엔 감소
 - 예산은 전년 대비 0.5조 엔 증가하였으나, 세수가 4.5조 엔* 늘어나 기초 재정수지 적자 폭은 축소됨
 - * 소비세 1.8조 엔, 법인세+소득세 2.6조 엔 증가
 - 공공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0.04% 증가한 5조 9,711억 엔
 - 정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에 제출, 심의를 거쳐 3월말에 확정시키는 것이 관례

□ (세출)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증가







- 생활과 직결된 사회보장비는 보육시설의 증설 등 육아 지원에 5,200억 엔을 편성, 전년 대비 2,100억 엔 증가

- 일본정부는 '17년 말까지 40만 명의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시키겠다는 목표
- '15년도부터 임금·물가상승에 연동하여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시스템 도입
 - 임금 전년 대비 2.4% 증가, 소비자 물가지수 2.6% 증가
 - 저출산·고령화에 의한 재정 악화 영향 -0.9% 등을 감액하면 국민연금은 전년 대비 1%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

* 국민연금 1인분 : ('14년도) 64,400엔, ('15년도) 65,008엔

** 연금 수급자는 약 100만 명 증가, 정부의 연금 부담은 11조 2,398억 엔(3% 증가)

< 15년도 변화되는 생활·경제 제도 >

육아/교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육 정원 8만 명 증가, 초등학생 보육 시설 정원 20만 명 증가 • 보육사 임금 3% 인상 • 아동 1인당 3,000엔 지급 • 대학생 장학금 확충
공공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간선 조기 착공 (신하코다테호쿠토-삿포로 5년, 가나자와-쓰루가 3년 단축) • 방재, 인프라 노후시설 교체
지방창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재정계획에 1조 엔 계상 : 고용 창출, 인구 감소 대책 등에 활용
생활보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저소득자 1인당 6,000엔 지급 • 보조금 심사 강화 : 월세 보조, 난방비 가산 등
의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난치병 환자 지원 확충, 자기 부담 인하 • 저소득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하 • 대기업 사원의 부담 증가
간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간병 관련 직원 임금 12,000엔(월) 인상 • 간병 보험의 보험료 및 자기 부담액 감소 • 간병 서비스업체에 지불하는 간병 보수(서비스 단가)를 평균 2.27% 인하

- 간병 서비스 단가를 2.27% 인하, 이용자의 자기 부담이 감소하지만 고령화로 이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도 전년 대비 2.8조 엔(2.6%) 증가
 -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500만 명으로 늘리는데 610억 엔을 투입하고, 국민건강보험에 1,800억 엔의 재정지원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 대비 11조 엔(2.6%) 증가

-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감안, 재해 대책을 위한 공공사업비로 5조 9,711억 엔을 확보
- ‘14년 나가노현에서 발생한 수증기 폭발을 사전에 예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화산 가스의 성분이나 농도 변화 등 사전에 온도 상승을 탐지하는 장치 설치를 위해 1억 9,400만 엔을 투입
- 공공사업은 「새로운 인프라 확충」에서 「보수·갱신」으로 변화, 공공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프라 정비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분야로 한정

< 공공사업의 포인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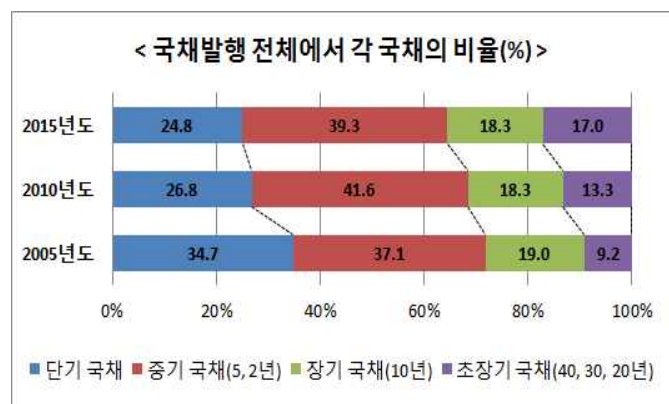
- 인력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공공사업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
- 지방 세수가 회복되어 지방교부세교부금은 대폭 감액, 농업 지원비 7,225억 엔, 지방창생(創生)사업비로 1조 엔을 계상하는 등 지자체 지원예산인 지방재정계획은 약 2조 엔 증가
- 엔저의 역효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책비로 약 4,900억 엔을 투입
-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도입 지원을 위해 저리 융자 신설, 기준 금리보다 0.65% 우대하고 원재료의 수입가격 상승 등 엔저로 인해 이익률이 감소한 기업은 0.6%까지 우대
- 중소기업의 샘플 개발비 등을 보조하는 「모노즈쿠리·창업·서비스 보조금」은 ‘14년도 추경 예산에 1,020억 엔을 계상
- 에너지·원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9% 감소한 7,965억 엔으로 편성
- 재생에너지 도입 1,307억 엔, 원전 관련 1,775억 엔을 반영하는 등 원전 재가동과 대체 에너지 도입을 동시 추진
- 고용 상황이 개선되어 고용보험 자금이 감소, 고용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8% 감소한 1,681억 엔
- ODA 예산은 전년 대비 1.5% 감소한 5,422억 엔(16년째 삭감)

재해 대책	수해·토사 재해 대책	4,143억 엔
	지진 대책	2,146억 엔
	재해 시 수송 루트 확보	5,455억 엔
도로	3대 도시권 물류망 강화	2,379억 엔
	지역 간 도로 네트워크 구축	4,763억 엔
공항	하네다, 나리타공항 등 기능 강화	150억 엔
항만	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의 기능 강화	687억 엔
	지역의 산업 활동을 지탱하는 항만의 정비	108억 엔
신간선		755억 엔

- 효과적인 대외 원조를 위해 태평양, 카리브해 등 섬나라 지원을 강화,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투자환경 개선 등 개도국과 일본이 공생하는 ODA에 1,065억 엔을 배분
- ‘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한 스포츠 관련 예산은 과거 최고인 290억 엔을 계상, 대표 선수의 훈련 강화와 관광 정책* 등을 중점 추진
 - * 관광청은 「2020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2,000만 명」 목표

□ (세입) 세수 증가로 신규 국채 발행 감소

- ‘15년도 세수는 54조 5,250엔으로 전년 대비 9% 증가, 24년 만에 회복
 -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는 소비세로, 전년 대비 1조 7,730억 엔 증가한 17조 1,120억 엔
 - 대기업들이 2% 정도의 임금을 인상 결과, 개인 소득세가 전년에 비해 1조 6,520억 엔 증가한 16조 4,420억 엔
 - 엔저에 의한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는 9,720억 엔 증가한 10조 9,900억 엔
- 소비세율을 8%에서 10%로 인상하는 시기를 ‘15.10월에서 ’17.4월로 연장, 일본정부는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, ‘15.10월에 소비세를 10%로 인상한다고 해도 기초 재정수지 흑자에 약 10조 엔 부족할 것으로 추산
 - 일본정부는 새로운 재정건전화 계획을 ‘15년 여름까지 책정할 예정
- 신규 국채 발행액은 36조 8,630억으로 11% 감소했지만, 상환기간이 긴 40년채, 30년채 등 초장기 국채 비율은 증가



- 국채 이자는 발행 시의 금리로 고정 되는데, 현재 30년채 이자는 약 1.1%로 최저 수준
-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초장기 국채의 발행을 증가시키면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

- 예산의 국채의존도는 38%로 6년 만에 40%를 하회하였지만, 국제사회 기준으로 판단하면 아직 높은 수준
- 독일이 '14년 신규 국채 발행 0을 달성, 미국이나 영국의 국채의존도는 10~20% 대로 추이

□ 시사점

- '15년 봄 통일지방선거, '16년 참의원 선거를 고려하여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평가
- 방위비, 지방창생 등 아베 총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
- 법인세율을 20%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이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과세 문제,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득세 재검토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적
-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저출산·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향후 사회보장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주목할 필요
- 일본 지자체의 세수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 지방과 일본 지방과의 경제 연계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5.1.14/15), 마이니치신문(2015.1.14), 요미우리신문(2015.1.15), 다이아몬드 온라인(2015.1.16)